

“수사권조정 · 공수처, 연내 실현”

박상기 법무부장관 을 주요업무 계획 발표 검찰개혁 제도화 · 인권보호 정책 강화 등도

법무부가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을 실현하겠다고 재차 의지를 밝혔다. 최근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검찰 포도리인과 피의사실공포 문제 등 인권보호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검찰개혁의 제도화 ▲인권보호 정책 강화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 등이다. 우선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를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총리,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 근절을 위한 독립적 수사기구로 관련 법안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상

정돼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권 조정과 함께 효율적인 자치경찰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가 자치경찰제안을 내놨지만, 검찰은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반응이다.

박 장관은 “최근 언론 보도는 검찰이 자치경찰제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과 다르다”며 “자치경찰제는 검찰이 먼저 주창했고 타당하기에 병행해서 하려는 것이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한 시각차가 있다. 제도라는 게 처음 시행했을 때 미흡해도 실정에 맞게 점차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검찰의 포도리인과 피의사실공포, 심야조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공정회와 심포지엄 등을 추진해 공문화하고, 7월 이후 그 연구결과와 여론 등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검찰 포도리인 등 문제는 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서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의자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최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로 다시 화두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기준 강화와 특별감찰반 의혹 관련 청와대 수사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박 장관은 “특정 사건과 연루돼 얘기하는 것이 아니

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앞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관계자 ‘억격’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비공개 소환을 하고, 공보준칙상 공개 소환의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해석한다는 방침이다. 수감이나 수의 등 신병과 관련된 장면에 대한 초상권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기소 전 피의사실공포를 막고자 수사관계자의 개별 언론 접촉을 제한하고 기소 전 수사상황 공개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 심야조사 현황도 파악해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12월에 12개 지검에서 실태조사를 한 데 이어 올해 1~3월에 전국적으로 확대해 파악 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는 9개 지검에서 ‘자발적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야 조사를 하는 등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자율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이 같은 결과를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종합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국민의 이동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출국금지 심사를 강화하고, 수용자 인권 보장을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위원장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격상할 예정이다. 환자·고령자나 생계형 범죄자 등의 가석방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취업 조건부 가석방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가석방을 활용해 수용인원을 조절한다. /뉴시스

민주당, 나경원 징계안 제출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문제 삼아 “의원 자질 의심… 대통령 · 국민까지 모독”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과를 방문해 징계안을 제출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이 대표발의한 징계안에는 민주당 의원 12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회법 제25조에 따라 품위를 유지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나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밀도 없는 옹호와 북변, 이제는 부끄럽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며 대통령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모독을 했다”고 징계사유를 설

명했다. 이어 “이 발언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망언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동시에 촛불혁명을 통해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독하고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무), 제146조(모욕 등 발언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켜 국회법 제155조 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징계안을 제출하면서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색깔론을 동원해 모독한 것이고 나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통합 · 미래 준비하는 국가 만들자”

바른미래 김관영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청와대 개혁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3일 국회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 원내대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바뀌는 정치개혁 과제’



다시 도약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기 위한 과제’, ‘우리사회를 지속하게 만들 민생개혁과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 등을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의 대한민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개혁 과제로는 청와대 개혁, 선거제도 개혁, 낙하산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만기청량의 청와대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푸트라자야 총리실에서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와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국가산단 미세먼지 · 악취 관리 체계화

평화당 조배숙 의원, 산단공 관리 부어 산업직접활성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한국산단공단관리법이 관리하는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악취, 오염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극심한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대한 계획 수립·시행하게 하고 산단 입주기업체가 미세먼지 및 악취,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필요한

체적으로 관리기관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재 국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악취, 공해물질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실태조사가 미흡한 상황이며, 조 의원은 이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써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또한,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미세먼지 문제 분석을 위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확인해본 결과 국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김진성 기자

정동영, 재건축 철거민 이주정착금 지급 의무화 법안 발의

민주당 정동영 대표가 작년 12월 서울시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강제철거로 쫓겨난 뒤 3일간 거리를 배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제2의 박준경 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재건축 철거민에 대한 이주정착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박준경 방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동영 대표는 “30대 철거민 박준경 씨의 비극적인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박준경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작년 12월 박준경 씨가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진 후 전국철거민연합,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주거네트워크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주거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마포구청 앞에 설치된 분향소를 방문하여 유가족을 위로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진성 기자

이처럼 국회에서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서울시도 재건축사업시행자가 철거민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용역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가 발의한 ‘박준경 방지법’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이주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재건축사업 구역에서 살던 세입자들도 재개발사업 세입자들처럼 이주정착금을 지급받게 된다. /김진성 기자

열린의회, 알찬의정

제8대 순창군의의회

군민과 함께하는 제8대 의회가 되겠습니다.

제8대순창군의의회 운영방침

- ▶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의회
- ▶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 ▶ 내실있는 의정활동
- ▶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의회

<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

순창군의의회

56039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 063)650-1021.1043 fax)063)652-6782
<http://www.sunchancouncil.go.kr>